



국토교통부
농림축산식품부

보 도 자 료

(배포) 2019. 1. 21.(월)

2019년 1월 22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 1월 21일(월) 11시 이후)

담당	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	과장 김기대, 사무관 이경수 (044-201-3823, 3826)
	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	과장 김기훈, 사무관 강봉규 (044-201-1511, 1520)

국토부-농식품부 손잡고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나선다

- 22일 도시형·농촌형 교통모델사업 합동 설명회 개최
- 농어촌 등 교통소외지역 대상 공공형 교통수단 도입 지원
- 국토부 78개 시·농식품부 82개 군 지역 대상 이동권 확대 552억 투입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, 이하 국토부)와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이개호, 이하 농식품부)는 오는 22일 전국 기초 및 광역 지자체 교통담당 관계자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형·농촌형 교통모델사업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.

□ 도시형·농촌형 교통모델은 농어촌 및 도농복합지역 등 교통소외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형버스(공공형 버스), 100원 택시(공공형 택시)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'18년 12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「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」에 반영된 내용이다.

○ 이를 위해 올해 국고 552억을 반영하여 국토교통부는 78개 시 지역(도시형 교통모델), 농림축산식품부는 82개 군 지역(농촌형 교통모델) 내 교통소외 지역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차량 구입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.

* 총 160개 시·군, 지자체별 (택시 5천만 원, 버스 약 3억지원) / 지자체 최소 매칭 비율 5:5로 지원 / 국토부 265억 원, 농식품부 287억 원

○ 또한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에 맞는 사업 진행을 위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 사업을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.

□ 특히, 정부는 도시형·농촌형 교통모델을 통해 올해 7월 노선버스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기존 노선버스의 일부 운행조정에 대비하여 대중교통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.

○ 지역 수요를 감안하여 기존 노선버스의 운영 효율화를 추진하되,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이 없도록 소형버스(콜버스 등), 100원 택시 등의 대체 교통수단을 투입한다.

○ 이를 위해 정부는 당초 100원 택시 위주의 지원 사업에서 버스 분야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등 사업전반을 개편하였다.

< 도시형·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체계 개편 >

사업명	지원대상		사업명	세부사업(지원대상)
공공형택시 (국토부)	택시	⇒	도시형 교통모델 (국토부)	버스
				택시
농촌형교통모델 (농식품부)	버스, 택시		농촌형 교통모델 (농식품부)	버스
				택시

□ 이번 합동 사업설명회는 교통 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형·농촌형 교통모델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하고, 확대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주민 이동권을 보장하는 사업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였다.

○ 지원 및 예산기준 완화, 정산시스템 도입 및 지역개발사업과 연계 강화 등 '19년 사업지침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, 버스형

사업에 대한 이해도 증진을 위해 횡성군 등 우수 운영 사례를 소개할 계획이다.

□ 국토교통부는 국민 모두가 편리하게 대중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라면서,

○ 특히, 올해 7월 노선버스 주 52시간이 시행 되더라도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 대책 등 관련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□ 아울러, 농식품부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국토부와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, 일선 지자체의 농정 및 교통부서 간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라면서,

○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이 단순한 대체 교통서비스 제공 차원을 넘어 농촌지역 고령 거주민의 의료·문화·복지서비스가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.

붙임 1. 도시형·농촌형 교통모델사업 합동설명회 개요

2. 농촌형 교통모델사업 추진경과 및 성과

□ 추진배경

- 교통소외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도시형·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에 대한 지자체 담당자 이해 증진을 위한 설명회 개최
- '18년도 지자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, '19년 제도 변경사항 등에 대한 지자체 담당자에게 설명함으로써, 사업 활성화를 유도

□ 추진일정

- 일 시 : 2019. 1. 22.(화) 10:30~15:00
- 장 소 : 대전 KT인재개발원 제1연수관 117호 소강당
- 참석대상 : 230여명
 - 국토교통부 및 농림축산식품부 담당자
 - 시·도 및 기초자치단체 담당자
 - 한국농어촌공사 담당자
 -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한국과학기술원

□ 주요내용

- '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'에 따른 도시형·농촌형 교통모델 운영 방안 설명 및 사업 시행절차 등 설명 (국토교통부, 농식품부)
- '18년도 사업추진 우수사례 발표(지자체 담당자)
- 도시형·농촌형 교통모델 주요 정책, 운영 계획 및 우수사례에 대한 질의응답 및 토론 등

□ 농촌 지역은 도시에 비해 지하철, 버스 등 공공교통수단 이용에 한계가 있어, 의료·문화·복지 등 서비스 이용에 애로

○ 농촌 교통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대중교통 미운행 마을을 중심으로 소형버스·택시를 활용한 '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' 추진('14년~)

○ 현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, '18년 전국 군 지역(郡)으로 사업 확대
- 국무조정실 협의를 거쳐 82개 군 지역은 농식품부, 78개 시 지역은 국토부가 주관('17.7월)

* ('14~'17년/시범사업) 총 30개 시·군, 매년 10억원, → ('18) 76개군, 41억원

○ 주 52 근로시간제 적용에 따라 농어촌·벽지의 노선 감소가 전망되어 대중교통 공백 해소를 위해 사업비 대폭 증액('19년 287억원)

□ 농촌 특성을 반영한 다각적인 사업 추진으로 대중교통 부족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촌 주민들의 실질적인 체감 성과 제고

○ 과소화·공동화가 심한 배후마을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농촌 고령층의 의료·문화·복지 접근성에 크게 기여

* 이용자수 : ('17년) 286천명 → ('18년) 1,577천명(550% 증)

< 교통모델 도입 전후 비교 >

도입 전		도입 후
• (대중교통 서비스 만족도) 44.7점	⇒	• (대중교통 서비스 만족도) 91.5점
• (버스정류장 접근시간) 29.7분		• (버스정류장 접근시간) 8.4분
• (버스 대기시간) 34.4분		• (버스 대기시간) 11.7분
• (주민 월 외출횟수) 4.2회		• (주민 월 외출횟수) 6.9회

* 2017년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모니터링 평가보고서(한국산업관계연구원)